

주요국 車 보험료 올리고 관행 손질 韓 요율 신호 불통에 손해율 상승세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내리는데
수리비 지수 상승률은 2.1% 유지
올해 들어서도 고손해율 구간 지속
요율·정비·보상 동시 조정 필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정비부품·공임·대차료가 구조적으로 뛰자 주요국은 '요율 정상화+수리·보상 관행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멈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영업익이 적자로 전환하면서 가격 신호와 현장 프로세스의 동시 보정 없이는 손해율 안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3%, 사업비율 16.4%로 합산비율이 99.7%까지 높아졌다. 차보험손익은 302억원으로 전년 동기(3322억원) 대비 90% 급감했다.

지난 8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7%로 작년 동월 대비 2.6%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4.4%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p 상승하면서 고손해율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과 비용의 미스매치 역시 누적됐다. 2022~2024년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는 -1.0%→-2.0%→-2.8%로 하락했지만 자동차수리비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3.8%→5.2%→2.4%로 올랐다. 2025년 7월에도 수리비 지수 상승률은 2.1%를 유지했다. 손해액 추세와 요율 신호가 어긋난 결과가 현 손해율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Chat GPT가 생성한 주요국 자동차보험 이미지.

자동차수리비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지속될 전망에 따라 주요국들은 보험료 조정과 수리비 절감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주요국의 자동차보험료 조정률은 2023년 영국은 45%, 미국은 17% 이상, 2024년 독일은 18%, 프랑스는 5% 이상 높아졌다.

수리비 절감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5년 7월 'Write it Right'(견적·부품 고지 강화)와 '분해 견적' 규정을 시행했다. 정비업체는 작업 승인 내역과 수리·부품 기록을 문서로 제공하고 중고·재생부품 포함 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충돌 수리 시에는 항목·부위별 분해 견적서와 재조립 비용·인건비·부품비·최대 재조립 소요 시간까지 포함한다. 요율과 정비·보상 규칙을 '패키지'로 손본 셈이다.

유럽은 부품시장 구조와 수리 관행을 직격했다. 독일은 지난 2020년 11월 범퍼·펜더 등 외장 부품에 디자인보호 예외 조항을 도입해 대체부품 사용을 넓혔다. 프랑스도 '수리조항'을 통해 재생·중

고부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했다. 영국은 공급망 회복, 대체차량(렌탈) 프로세스 정비, 디지털 워크플로우 도입으로 평균 수리기간(cycle time)을 크게 줄였다.

국내의 경우 2024년 영업수지 적자 전환에 이어 2025년에도 손해율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주요국의 사례처럼 감독·당국·업계가 요율·관행·부품시장까지 '패키지'로 손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요국은 자동차수리비 증가에서 비롯된 손해율 상승과 보험영업이익의 적자에 대해 보상 및 차량수리 관행 개선, 자동차보험료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다르게 코로나19 이후 영업수지 흑자를 기록하다 2024년에 영업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자동차수리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 대한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내일부터 실손24 앱에서 보험금 청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부모 대신 자녀 등 제3자 청구 가능

오는 25일부터 실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병원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험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2단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1단계 실손 청구 전산화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손24 앱을 내려받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보유한 실손보험 계약 확인과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앱에서 회원가입 후 보험계약 조회 선택→병원 선택→진료 일자 및 내역 선택→

청구서 작성(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청구 내용 확인 및 전송을 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에서 연계된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앱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된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실손24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제3자 청구기능을 활용해 고령층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 제3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나의 자녀 청구 기능을 통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난 22일 하나금융그룹의 수어교육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장애인 인식 제고 앞장

‘임직원 수어교육’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임직원 수어교육'을 실시한다.

'임직원 수어교육'은 청각장애인의 공식 언어이자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시각언어)를 배움으로써 청각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포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농(農)문화와 농(農)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기적인 임직원 수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어교육을 포함해 누적 270여명의 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청각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수어교육은 청각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함께 '경제'와 '대화'라는 주제로 일상 속 기본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며 자원봉사 등 농인(聾人) 대면 시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 가능한 용어와 문장 등의 실용적 수어를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하나금융 ESG 상생금융팀 관계자는 23일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과 실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실용적 수어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포용문화 확산 노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채무상속 미성년자 채무조정대상 포함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앞으로 금융지식이 적어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채무조정 후 성실히 상환하면 면책해주는 제도도 면책 금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복위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고 3년 이상 상환한 자는 채무 원금 합계 금액(1500만원 이하)에 한해 잔여채무를 면책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 금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미성년자가 금융 지식이 적어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

대출규제·인구감소 ‘이중고’ 성장 한계 온 지방 저축은행

지역 내 의무 여신비율제도 적용
인구 감소 빨라져 맞추기 어려워

지방 저축은행이 대출 규제로 성장 담보 상태에 빠졌다. 인구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일부는 타 지역 여신을 줄여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 소재 저축은행이 지역 내 의무 여신비율제도 40% 규정을 따르기 위해 타 지역 여신을 줄이고 있다. 인구 자체가 감소해 영업 지역 내에 대출받을 차주가 줄어들자,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체 여신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총 6개 영업구역으로 구분된 저축은행은 지역 내 의무 여신비율제도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50%, 지방의 경우 40% 비율에 맞춰 개입 및 중소기업 대상 대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14년째 지속돼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지방 소재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 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한 바 있다. 당시

에도 인구 감소 현상 및 비대면 업무 증가로 해당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규제 비율을 완화했다.

문제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는 인구가 거의 없다. 애초에 발원 차주가 없기 때문에 지방은 규제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며 "지방 저축은행 성장이 담보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 저축은행은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타 지역 여신 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다른 지방 여신을 줄였다"면서 "다른 지방 여신을 줄여 전체 여신 규모를 줄이면 영업권역 내 여신 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 총여신 감소세는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청권역 소재의 상산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 총여신이 지난해 2분기 1조 1413억원에서 올해 2분기 8771억원으로 2642억원 줄어들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